

#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국조요구서 국회 제출

###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특별위 18명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진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8인)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욱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영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편에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원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실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의혹 제기 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개입 여부와 대통령 처가의 인척 및 법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18명 규모로 제시했다. /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 “野 양평고속도 국조, 억지 정치공세”

### 국힘 김기현 대표 “양평주민들에 어려움 닦치지 않도록 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닦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권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 해놓고 이제 와서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닦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스

## 만화·웹툰 콘텐츠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 이수진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웹툰은 미생, 이태원클러스 등 국내 기

업들이 글로벌 웹툰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355.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0%나 급증한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달에는 이의원의 주관으로, 웹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라북도 웹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웹툰 작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 김정기·김솔지 도의원 부안 청년농업인과 간담회

전북도의회 김정기(더불어민주당, 부안)·김솔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7일 부안군 사무실에서 부안군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기 의원은 “이번 호우피해로 전라북도 등 농작물 피해상황이 접수되지 못해 피해지원을 못 받고 있어, 정부지원 전라북도 재배단지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의 보상 기준 현실화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피해상황을 적시에 행정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솔지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연구회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

### 민주 윤준병 의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현재 탄핵 기각 관련 수해 피해와 관련 “상습침수구역 대상 강제배수체계 구축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읍·고창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지 않고 있다”며 “이번 현재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과 연이은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상민 장관은 자진사퇴하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한 사람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총체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각에선 이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며 “이상 기후로 수해나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도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자연재해가 재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의 인이한 재난안전대응체제로 인해 150 분이 생명을 잃은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두 누구도 책

을 지키는 일”이라며 “수해가 발생

하면 정부가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이내 시들해지는 구태가 아닌, 비용이 들더라도 항구적인 수해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자연재해에 의존하는 상습침수구역과 저지대 등에서 매해 재해가 반복됨에도, 지자체는 투입할 예산이 없어 손놓고 있는 위험지역이 즐비하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강제배수체계를 구축하거나 5개년 수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해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라도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어구들이 입은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로 정부가 곤경한 논공·기부살 등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난 28일 출범한 여야 수해복구 TF가 기존 자연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기자

## 수해 예방 하천법·수계 물관리법 국회 통과

### 민주 김영진 의원 “중장기적 재해 예방 대응 위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명, 기권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

진강 수계 관리법은 수계관리 기금으로 거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사고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안(도시침수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국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뉴스

##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체계화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법제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구체적인 직권발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갑질근절 등 9건 안건 심의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 된 제28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루어 의원과 이명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내 노후 급수관개선 대책 마련’과 ‘다져너 기준 확대’에 관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9일과 2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명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명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21일부터 25일까지는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심의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각종 안전성사 및 주요업무보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무더위철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군민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